

갈지자 행보·공천 잡음...민주 왜 이러나

상품권 비리 사슬 드러나나

문광부 국장 급품 수수 포착 자택 등 압수수색

‘전효숙 동의안’ 표결 불참 “정체성 잃었다” 여론 보선·신안군수 공천도 갈광질광 지역민심 악화

민주당이 최근 한나라당과의 정책 공조에 나서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 불참한 점과 관련, 당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10·25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도 각종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어 지역민의 시선이 뜨겁다.

민주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효숙 현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표결에 불참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소장 임명동의안 무산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국정 장악력을 약화시켜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 확보 등을 감안한 당리당략적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전 현재소장 후보자가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도덕적, 직무적 결함이 없으므로 국회 표결에 민주당이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면한 것이

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나라당과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눈길도 뜨겁다. 이달 초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국민생각’ 토론회에서 ‘한-민 정책공조’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를 넘어 ‘한-민 신당설’까지 떠돌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소위 ‘한민당’이 창당될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은 19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지난 18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화기에 예한 분위기를 보다 못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연합은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정책 공조는 민생 현안에 제한되고 대선에서의 공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역 여론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직권 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의정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의 10·25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해남·진도의 경우 공천을 신청한 예비 후보자가 13명이나 되는데도 민주당은 전윤철 감사원장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며 외부인사 영입을 시사하고 있다. 공천을 신청

한 예비 후보자들은 ‘우리는 들러리나’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안군수 후보도 충분한 법률 검토와 지역 사정 고려 없이 후보를 내정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갈광질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문화관광부 A국장을 19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게임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어서 한 달째 맞는 사행성 게임 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문화관광부 A국장이 씨유크 대표 류모씨에게서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A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실시함으로써 상품권 인종·지정 로비의 의혹 및 게임물 심의 로비 등 광범위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무원 사회로 직접적인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게임비리 수사가 문화부 등 정·관계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돈거래 단서 포착=검찰은 씨유크 대표 류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2년 후반~2003년 류씨 측 돈 수천만원이 A국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A국장이 류씨의 상품권 인종·지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씨유크가 지난해 3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됐고 지정업체로 뽑힌 시기는 작년 8월로 돈거래가 이뤄졌던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급품수수의 정확한 성격을 캐는 데 주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돈 수수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급품 거래가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A국장이 류씨의 상품권 발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 않았어도 담당 부서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씨유크의 회사 운영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정관계 수사 신호탄=한 달간 계속된 사행성 게임비리 수사는 주로 상품권 업자들과 게임기 제조업자, 이익단체 관계자, 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이날 문화부 국장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핵심 의혹 부분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인 상품권 인증·지정 과정의 로비와 정책 결정 과정의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의 주요 목표가 이제 비로소 가시권에 들어오는 형국이다.

게임비리 의혹의 종착점에는 문화부와 영상품등급위원회, 국회 문화위 소속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들이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돼 온 터라 검찰 수사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비리의 물통을 향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맨땅’에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각종 첩보나 의혹 등을 근거로 청구한 문화부 공무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A국장의 영장을 선포 발부해줬다는 점도 수사 전망을 밝게 해준다.

법원 관계자는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다. 검찰 수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게임비리 의혹 수사의 물통인 정·관계 로비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DJ “한미 FTA 점 널 필요없다”

與 지도부 만나...“특사 보다 개인자격 방북 바람직”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조선,철강,반도체 등 세계 1위 업종이 많은데 우리나라 저력으로 볼 때 겁을 낼 필요가 없다”며 “이것이 장사하는 셈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만나 “한미 FTA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

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우리당 이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장사꾼의 관점에서 보면 장사꾼이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제일 부자 나라이고 장사하기 좋은 나라라서 이런 나라에 가서 장사 한번 잘해보자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내로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DJ의 이날 언급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김근태 의장이 여당내 일각의 ‘DJ 특사론’을 언급하자 “개인자격으로 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사는 정부 사람이 가는데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상대방도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문제를 푸는데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만나게 역시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향해 “전통적 지지자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한 뒤 국민이 관심을 두는 3가지 주제로 남북평화, 경제문제 해결 및 생산적 복지, 중산층 회생을 들고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특별회견 등을 통해 미·일 우파를 강력비판한 것과 관련, “잘한 것이 없지만 댓금이 많이 올라왔다”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한데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네티즌의 반응을 살핀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홍일 의원직 상실하나 28일 대법 확정판결

민주당 김홍일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8일 확정된다. 특히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은 노무현 대통령 사법시절 동기인 김능환 대법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기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10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상고한 김홍일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을 오는 28일 진행한다. 김홍일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항소심에서 안상태 전 나라중금 사장으로 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 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징역 2년에 집행유

한화갑대표 상고심은 盧대통령 사시 동기 김능환 대법관에 배정

에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김홍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민주당 비례대표 5명인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홍일 의원실 관계자는 “김의 원이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할 말

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인 김능환 대법관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과연 언제쯤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표의 대법원 판결 결과는 추후 정국은 물론 정계개편 과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항고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함께 하세요!

하나로텔레콤 전문유통망 대모집

대한민국 통신 산업의 선도자 하나로텔레콤에서 초고속인터넷, 전화, 하나TV의 성공신화를 함께 할 전문유통망을 모집합니다. 장기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로텔레콤 전문유통망이 되시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 ✓ 탁사 대비 경쟁력있고, 다양한 상품 영업 가능
- ✓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가능
- ✓ 영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 지원(통신비 등)
- ✓ 전문유통망 대상으로 추가적인 영업/상품교육 시행
- ✓ 지역별 영업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영업소설 지원

- 지원자격: 통신분야 영업 및 유통망 운영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의류업과도 간취력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접수기간: 2006년 9월 15일(금)부터 9월 22일(금)까지
- 사업설명회: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신청서 접수:
 - 홈페이지: 하나로텔레콤 홈페이지 (www.hanaro.com)
 - 대표 전화번호: 02-8275-5833~5
 - 대표 FAX번호: 02-8275-5330~7
 - 별도 회사번호

지	시	연락처	Fax
서울 강남 지역	02-5005-4145	02-5005-8115	
서울 중랑 지역	02-5005-2644	02-6206-6321	
수도권 하남 및 김포 지역	031-344-6511	031-344-8319	
수도권 익산 지역	031-819-8613	031-819-9511	
충청 지역	042-340-2217	042-340-2155	
김해 지역	053-240-2000	053-240-2299	
영남 지역	051-940-2022	051-940-2029	
부산 및 제주 지역	062-440-2015	062-440-2019	

